

# ‘조선·에너지’에 집중... 한국기업 참여로 실익 키운다

## 3500억 3대 투자 전략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카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 ◆美원하고韓잘하는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는 크게 조선업(1500억 달러)과 기타 전략 산업(2000억 달러)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조선 1500억·전략산업 2000억  
MRO·조선소 현대화, 美재건 겨냥  
LNG·원전·송전망 협력 유력

특히 조선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카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와 군수·상업용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보증과 선박 금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한국 기업이 수취하는 구조적 실익이 담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산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미 양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핵심 변수다. 이에 따라 LNG 발전, 원전,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양국은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플랜트와 더불어 노후 원전 설비 교체, 송전망 확충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 역시 유력한 후보군이다.

앞서 일본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등에 투자를 결정하며 관세 협상력을 높인 사례도 참고 모델이다. 한국은 조선

MRO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중 97.5%(1,063억 달러)가 발전 시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력 부족을 국가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편 관세 예외’ 지위를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韓 기업 참여형’로 공동화하려 차단  
가장 큰 숙제는 전문학적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즉 ‘산업 공동화’ 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분 참여형’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과 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이 직접 설계·시공·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변압기나 강관, 시스템 등 국산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동반 진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현금 대신 지분형 투자 추진 직접 참여로 수익 환수 노력 기자재 수출 연계, 공동화 차단

건설업계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담수화 플랜트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의 대미 투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표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정 짓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IEP도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철강 등 제2차 관세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의 피해

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일 연대 통한 ‘규모의 경제’ 모색도

한미 양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한국은 관세 부담 완화라는 실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향후 통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IEP는 나아가 한·일 양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협력이 점차 진전되는 양상을 참고해 대미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대미투자를 연계해 공급망 결핍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다. 특히 구체적인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동원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정부 출자 2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임박

## >> 1면 ‘3500억 3대 투자...’서 계속

앞서 산업부는 미국측의 투자 요청 분야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측과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이라며 “미측과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조만간 출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총 52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한미 실무진은 워싱턴 D.C.에서 루이지애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소형모듈

원전(SMR)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유력한 1호 투자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 구조에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공동 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건설·플랜트 기업들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틀을 짜고 있다”며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후속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우리 경제의 모범,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 1 사업 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2 신청 자격

-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공고일 2026. 3. 26. 기준)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외

###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3. 26(목) ~ 4. 24(금)
- 신청방법: 제출서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공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 알림소식 → 사업공고 또는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co.kr) → 공지사항
- 접수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국민추천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2026. 3. 26(목) ~ 4. 10(금)
- 추천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민원참여 → 국민참여 → 국민추천] → 하단 명문장수기업 확인]에서 기업 추천
- 이후 추천받은 기업에 추천·내용을 안내될 예정, 추천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제출(명기방식 통일)

### 4 확인 절차



### 5 명문장수기업 지원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 6 제도 상세안내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고

### 7 문의

-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 2124-3148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 02) 3275-0106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FOMEX 한국중견기업연합회